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토론회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2.10.23 16:35

현 지도부 총사퇴후 비대위 구성↔조합원들 직선제위한 비대위 원치 않아



▲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토론회. 사진=매일노동뉴스 정기훈기자

민주노총이 직선제 유예 단일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 가운데 임원 직선제를 둘러싼 토론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토론회가 2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민주노총·매일노동뉴스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됐다.

- 주최 :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 일시 : 10/22(월) 오후 4시~7시30분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사회 : 매일노동뉴스 박운 편집국장
- 토론패널 :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김용식 민주노총 경북본부 사무처장
 -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 정광진 좌파노동자회 공동대표

사회 =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 박운이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토론을 시작한다.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민주노총 집행부가 유예안을 제출하면서 김영훈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오늘 토론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직선제가 과연 조직혁신 과제인가에 대해 말씀해주시라.

김영훈 = 오늘 토론이 매우 뜻 깊다. 직선제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 중요한 내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 민주노총 직선제가 조직혁신의 중요한 기제로 제출된 것은 민주노총의 위기, 민주노총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단일한 노조나 단일산별처럼 운영돼야 한다면 직선제는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산별조직 강화를 통해 산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산별투쟁과 조율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직선제 내용과 원칙적으로 불일치한다. 저는 잘못 준비된 직선제가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한 경쟁이 돼서 상층 일부의 정파갈등이 현장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양한 통합력과 지도력이 필요한 민주노총에서 선거로 인해 패권이 확산되고 공고히 될 것을 걱정한다. 선거제도가 중요하지만 민주노총 내 단결과 조합원의 자

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선거를 치르기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투여하는 모순을 범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유예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결정을 집행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길은 없다. 유불리와 책임 공방을 넘어 민주노총 혁신과 단결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태연 = 직선제를 한다고 노동운동 내 갈등을 해소하진 못한다. 핵심은 민주노총 총파업이나 조합원들 투쟁, 일상적 지침 등 요청되는 것이 많은데 그 기반을 마련하려면 조직을 밑바닥에서부터 점검하고 조합원들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2012년 현재 민주노총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나 지금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면 조합원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어렵다. 상층의 결정이 막히는 구조를 뚫지 못한다. 직선제를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지만 직선제는 민주노총의 해결해야 할 주요한 조직혁신과제다.

신인수 = 2012년 10월23일 현재는 혁신과제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기를 뒤흔든 통합진보당 사태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는 보수정당보다 훨씬 민주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재기불능 상태가 됐고 두 진영으로 쪼개졌다. 준비 안되고 잘할 수 없는 것을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직선제를 하려면 인적 전제조건, 선거인명부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 등 물적 인프라가 필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것을 마련하지 못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하고, 왜 못했느냐에 대한 진지하고 격의 없는 토론은 필요하다. 그 인적 물적 한계를 어떻게 고칠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

정광진 = 저는 직선제가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위한 전제라고 생각한다. 좌파는 직선제 실시를 주장한다고 말하지만 정파 입장 때문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67만인지, 80만인지 모르나 조합원에게 소중한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비정규노동운동을 민주노총이 어떻게 조직할지, 그들을 어떻게 민주노총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지의 문제도 함께 녹아있다. 법률원장이 인적 물적 전제조건을 말했는데,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 김영훈 위원장이 현장을 얼마나 순회했고 조합원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려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김승호 = 80년대 중반 현장에서 노조를 만들 때 당시 어용노조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자고 했다. 직선제를 하면 우리가 집행부를 가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재에 와서는 조합원이 노조의 주인이 되는 방식이 직선제뿐만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민주주의의 관련 책을 보니 민주주의의 종류가 40여 가지나 됐다. 왜 직선제를 고집해야 하는가? 그것이 민주노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뒤덮을 사안인가? 직선제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껌데기였다.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해 통과된 것이다. 조합원들 요구를 지도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할 절차적 민주주의 방안을 모색하는게 맞다. 3년에 한 번 직선제를 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해소될까 의문이다.

김용식 = 저도 같은 갈등을 했다. 이 이야기가 작년 이맘때나 올 봄에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아쉽다. 1인1표제 방식의 선거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 이미 6년 전부터 직선제를 하면 지극히 형해화된 것만 남을 거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채택하며 조직혁신방안으로 함께 제출한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 대산별 건설, 지역조직 강화는 사라졌다. 핵심은 사라지고 직선제만 토론하는 것은 민주노총 현실을 반영한다. 유예안이 올라왔고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대대에서 어떻게 결정돼도 혁신의 과제가 될 수 없다.

사회 = 두번째 주제, 직선제 준비가 어떻게 돼 왔는지,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중심으로 직선제 관련 조직상황에 대해 먼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토론해 주시라.

김영훈 = 단위노조는 다 하는데 왜 못하냐고, 민주노총이 직선제 안하면서 비정규 노동자 유권자운동을 하느냐고도 한다. 민주노총 조직을 단위노조와 일치시키거나 노조 내 민주주의를 부르조아민주주의로 상치시켜선 안 된다. 대전본부 선거나 통진당 사태 때문에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다. 절대다수 공조적이 직선제를 왜 하느냐고 한다. 준비과정에서 규정과 규칙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있었



▲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 사진=매일노동뉴스 정기훈기자



▲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사진=매일노동뉴스 정기훈기자

다. 이 정도 선거를 치르려면 국가 행정기관에 준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잘못하면 부정부실선거를 피할 수 없다. 해보지 않고도 예상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직선제를 완료한 위원장이라는 공명성으로 접근하면 그게 오히려 무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김태연 = 직선제를 금년 12월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준비된 직선제를 어떻게 할지와, 12월에 약속한 직선제를 못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토론을 어떻게 할지 난망하다. 준비과정에서 산별대표자들이 직선제를 왜 하느냐고 했다는데 그들을 불러 함께 토론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을 뭘로 보는지 이해 못할 발언이다.

신인수 = 다름 없는 사실은 규약에 의해 민주노총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키지 못한 것은 김영훈 위원장이 책임져야 하며 조합원이 결정할 일이다. 직선제가 좋다 나쁘다 하고싶다 아니다를 떠나 대대 결정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준비과정에서 조합원명부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도 67만인지 80만인지 하셨듯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회의자료마다 다 다르다. 조합원명부 중 조합비를 납부한 선거인명부는 68% 취합됐는데 이는 10명 중 3명이 누락된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 결과에 대한 유무효 시비가 우려된다. 가장 큰 고민은 선거관리 문제다. 규약과 규정에 따라 단사와 가맹산하조직 선관위, 총연맹 중앙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통합진보당보다 우리는 3~4배 규모의 직선제를 해야 하는데 엄청난 선거비용과 사람이 필요하다. 조합원명부와 선거인명부, 세 단위 선관위 구성을 못하는 문제로 인해 직선제 연기나 재논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사회 = 2006년 이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나?

신인수 = 60만 현장 투표 방안이 없어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한 것이 모바일투표였다. 그러나 직접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모바일 투표가 안 되는 특정제품이 있어 현장투표로 돌아가야 했다.

김용식 = 전 직선제가 근본적 조직혁신 과제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걸 빼고라도 선거관리의 신뢰성이 담보되는가의 문제도 크다. 민주노총이 적어도 5,6천개에서 만개의 투표구를 만들어야 하고, 규정상 선관위원도 3~5만명 뒤서 투표기간 5일 간 그들을 상근시켜야 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12월19일 선거를 하려면 8월3일 이전에 가입한,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정한 모든 이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 상급단체로 정하지 않았어도 같이 활동하는 조직들이 현장에 많이 있고, 규약상 조직전환을 안했어도 활동하지 않는 조직 또한 많다. 심각한 문제다. 재검토하자고 누누이 말했지만, 규약으로 정했으니 민주노총 간부들은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이제 유보안을 낸 것이다. 신뢰성을 담보할 조건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김태연 = 준비가 안됐다고 여러 측면에서 말한다. 준비됐다고는 아무도 안한다. 왜 준비가 안됐는가, 준비 못할 문제인가를 진단해야 한다. 선거를 위한 세세한 규정과 규칙이 필요하고 부정시비가 발생할 경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전대비 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급급하면 해결능력이 없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를 못 만드는 것이 어디 책임인지, 민주노총 사업장 단위에서 직접선거를 다 하는데 자기 조합원 명부를 90% 이상은 갖고 있을텐데 주지 않는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모바일투표 준비에 집중했고 직접투표 준비기간은 얼마 안됐다. 기간통합진보당 사태가 없었으면 모바일투표를 더 밀고 갔을지도 모른다.

김영훈 = 모바일만 준비하다가 통진당 때문에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모바일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투표율을 높이고 보다 많은 조합원들 참여를 이끌어내려 한 것이었다. 사전에 합의 안 된 선거제도가 필연적 목적이 수단으로 전도되면 안 된다. 직선제가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를 진정으로 하려면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해야 한다. 단위노조를 조합비로 운영되니 명부가 확보되지만, 총연맹은 의무금 방식으로 2~3단계 거쳐 올라온다. 선거인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총연맹은 중앙선관위를 구성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선거기준 부여기준 등을 조직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매일노동뉴스 정기훈기자

사회 = 민주노총 집행부 원안을 어떻게 볼지, 직선제를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해 토론하자.

김영훈 = 직선제를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했고 3년을 유예하는 것이 폭탄 돌리기가 돼서 다음 집행부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 모든 것을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차례 홍역을 겪은 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완전한 직선제로 갈 수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조합원 참여가 보장되면서 실질적 혁신목표에 부합되는 방안이 3년 내 합의되길 기대하며 제출했다.

김태연 = 민주노총 위원장 면전에서 죄송하지만 9월 대의원대회에 앞서 사퇴했어야 한다고 본다. 예정된 12월 직선제가 어렵다면 바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시간을 연장해 2013년 상반기 중이라도 하도록 준비했어야 했다. 조직이 아무것도 못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흘려보냈다. 직선제 준비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여러 문제들을 고백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이다. 조합원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함을 실토했고, 민주노총 각급조직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상황에서 직선제를 유보하고 간선제를 하면 민주노총이 얼마나 힘을 가질지 의문이다. 3년 유보는 안 되고, 정파적 입장을 떠나 다 달라붙어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합집행부를 말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가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같이 민주노총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김영훈 위원장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 이들이 모른 척할 수 없다. 유일한 방안은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제세력이 같이 비대위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직선제를 준비해 조직을 살리는 것이다.

김영훈 = 준비를 못하는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질 것이다.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임원이 총사퇴해야 하는데 직선제 실시 여부를 놓고도 임원들 중에는 의견이 다르다. 임원 전체가 사퇴할 문제인가?

김용식 = 현재까지 규약 규정에 의해 준비된 직선제는 폐기해야 한다. 조합원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방안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상시적으로 일하지 않고, 1년에 9개월 열흘 정도 일한다. 연속 몇 개월 이상 조합비를 내면 권한을 주는데 조합원으로 등재된 이들은 만명이 넘지만 실제로는 천여명이 투표한다.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신인수 = 저 역시 집행부 임원 중 한 사람이며 중직성원이다. 제가 절 어떻게 볼 것인가이기도 한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김영훈 위원장뿐 아니라 규약을 위반한 민주노총 상집, 중집, 활동가 전체가 조합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다만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누가 질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민주노총에 없다. 직선제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처럼, 임기를 지키는 것도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다.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는 본인이 그만둬야겠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대의원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두 달 후면 새정부가 출범한다. 쌍용차투쟁, 학습지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권리 보호를 비대위가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내년 초기 노동정책 관련해 대등한 대정부 교섭력을 발휘해 설득하는 것은 정상적 임원도 잘하기 어렵다.

정광진 = 직선제 준비과정에서 조합원명부를 확보한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본다. 66만7천여명 중 67%에 달하는 40여 만 조합원을 민주노총이 확인한 것이다. 전체 조합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느냐가 핵심이다. 선거관리 문제도 유예 배경인 것 같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제기된 걸로 안다. 민주노총 조합원명부에 올라가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다. 조합원과 선거인명부 확보를 보장하고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 직선제가 불가능하다며 유예 입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것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용지다. 민주노총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안해 본게 아니다. 지금은 그 어디서도 최소한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 정광진 좌파노동자회 공동대표. 사진=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기자

김영훈 = 일반적 조합원 총회와 선거를 등치시켜선 안 된다. 선거제도라서 고민하는 것이지 조합원 의사에 반해 뭘 하자는 것이 아니다.

김승호 = 총회와 선거는 다르다고 했는데 분명히 다르다. 100%가 아니라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5%, 10%에 의해 나머지가 뒤집힐 수 있는 것이 선거다.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으려 했고, 그게 안됐다는 것을 이해 못하면 이념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조직혁신 전제라고 했는데 솔직히 전 그렇게 안 본다. 직선제가 왜 조직혁신의 과제인지는 다른 방식으로 주장돼야 한다. 조직 관료주의는 복지부동만이 아니다. 자신들이 이해관계나 전체 조직에 부담을 주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는 것 역시 관료주의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겠는가?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면 공감이 간다. 이에 반론을 펴는 입장은 저 같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있고, 조직 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직선제는 여전히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풀 적인지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자칫 직선제가 가져올 조직에 대한 후과를 생각할 때 애초 직선제를 제기한 근본원인, 즉 조합원이 민주노총 주인이 되게 하는 다른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김태연 = 부정투표 등 여러 가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장치를 마련하는게 준비다. 3년을 유보할 게 아니라 준비를 더 해야 한다. 임기 채우는 집행부를 이야기했는데 일을 잘해서 조합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집행

부가 나와야 중도하차하지 않는다. 직선제가 지금 이런데 임기를 채운다고 하는가? 조합원이 들으면 통탄할 일이다. 집행부가 총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용식 = 지난 1월 대대에서 안건설명을 할 당시에도 전 불가능하다고 봤고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주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정부도 중앙선관위가 명부를 확보하지 않는다. 42만이 의미있는 숫자라고 하는데 선거인명부 42만은 실패다. 산별연맹별 선거인명부 확보로 충분하다. 산별연맹들이 먼저 직선제를 하고 지역조직들이 하고 총연맹이 굳이 해야 한다면 그 다음에 해도 된다. 투표권을 쥐도 안하는 사업장, 조직갈등 사업장이 산재했는데 총연맹이 불완전한 선거인명부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다.

신인수 = 돌직구를 하나 던지겠다. 토론할 때 각자 조합원 이야기를 한다. 전 그런 토론을 볼 때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느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직선제를 의미있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는가? 제가 보기에 조합원은 관심이 없다. 민주노총 직선제를 왜 하는지, 간부들이 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토론되고 설득돼야 한다. 민주노총 직선제팀이 현장에 하방해 토론하고 욕 먹고 1년 내내 그렇게 해야 직선제를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물적 조건을 보면 직선제팀장과 팀원이 각각 1명씩이다. 직선제를 안하려고 한거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총연맹 다른 실들도 마찬가지다.

김태연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직선제에 열화와 같은 기운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건 직선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데 조합원이 직접투표하자는 것은 그렇게 큰 설명이 필요 없다. 어느 조합원이 안한다고 하나? 민주노총 집행부와 산별, 지역본부 전체 책임이다.

정광진 = 조합원 명부 취합을 총연맹 중앙선관위가 못하고 산별을 거치는 한계가 있다면 원심력을 갖고 명부를 취합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취합하는 방안이 불가능하지 않다. 1706개 단사로 구성된 민주노총이 모든 사업장에 투표구와 선관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 아니라고 본다. 지역본부와 지부 단위에 조합원들이 와서 투표하면 가능하다. 조합원 명부를 충분히 열람하고 보강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과반 이상이 투표를 안할 거라고 선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우려되는 것을 과대해석해 민주노총에 문제가 생기고 연맹들은 초토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사진=매일노동뉴스 정기훈기자

김영훈 = 가능한 문제들이 다 드러나야 다음 선거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동의 못한다. 연맹들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별 특성에 맞게 조직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무모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 강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대대도 못하는 조직이 직선제를 하려 한다는 말이다. 가부 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결되면 책임을 질 것이며, 유회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유회되면 현행 규약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직선제를 치러야 한다.

김태연 = 집행부 안이 통과될 수 있으나 부결될 수도 있다. 중집은 부결시나 유회시 현 집행부가 현 규약대로 직선제를 치르라고 했다. 현재의 규약대로 치를 수 없다고 것에 저도 동의한다.

사회 = 네 번 째 주제에 대한 양측 내용이 하나도 없다. 3년을 더 준비하면 직선제를 할 수 있는가? 반대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설명해달라.

김영훈 = 물러난다고 한 사람이 대안을 말하려니 마뜩찮다. 현재의 대의원대회를 통한 선출방식이 유력하다. 전제로 대의원직선제 실시방안을 생각했지만 부결됐다. 정률제와 조합비는 통과됐는데 대의원직선제는 부결됐다. 전 그게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봤다. 선거인단제도도 고민했는데 소수자가 충분히 들어오고 권력분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원장 후보가 격돌하는 방식

이 맞는지, 적정이상 표를 얻은 사람은 지도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도 본다. 최다투표자와 차점자에게 차례로 부여하고 통합지도력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전 대의원대회 무거운 결정사항을 가능케 하려다 직선제를 수행 못한 위원장이 됐다.

정광진 = 현 집행부는 규약을 위반했고 냉정하게 직선제를 할 의사가 없으니 물러나는 것이 맞다. 현 집행부가 물러난 후 직선제 실시 의지를 갖고 동의하는 제단위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직선제비대위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직선제준비팀이나 민주노총 실무적 요소들을 어떻게 보강하고 만들지가 관건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장이 말한 여러 산별연맹 조직의 다양한 선거방식과 룰을 민주노총 내 큰 원칙 위에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인단을 공고한 후 조합원이 아니라거나 조합비를 미납했다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보강하면 된다.

김태연 = 민주노총 집행부가 결단하고 조직을 어떻게 가동할지 논의하자. 이동투표는 안된다고 전제하는데 어디서 나온 전제인가? 부정선거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안된다, 저걸 안된다 그렇게 전제해놓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원칙이라고 한 것 다 뒤집어놓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

신인수 = 비대위 체제와 직대 체제를 구분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직선제를 위한 비대위를 원할까? 정리하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조직이 아닌 직선제를 위한 비대위를 조합원은 원치 않는다. 민주노총 직선제는 실험이 아닌 현실이다. 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다. 10억, 20억 예산이 든다. 비정규직 조직화에 투입하고 투쟁에 써야 할 돈 아닌가? 시행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못하면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 조합원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이 필요하다. 명부를 안내면 조합원이 나서서 왜 안내냐며 압력이 들어올 정도여야 한다. 민주노총 주인임을 자각하고 왜 직선제를 하는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차기 집행부가 구성돼서 원안부터 점검하고 비판받고 해야 한다.

김용식 = 이미 규약규정이 그런데 가결되던 부결되던 유회되던 집행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정점과 한계 속에 현 지도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직선제를 시행하려면 우리 조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규약과 규정 상 모호함이 많고 현실에서 극복하기 어려워 실행 불가능하다고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많은 이들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규약규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고 싶다면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광진 = 직선제는 조직혁신의 전제다.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직선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민주노총이 새롭게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 직선제를 안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220여 개 나라를 일일이 확인했나? 직선제 유보는 조합원에 대한 배신행위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슬기롭게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총연맹 지도력이 유명무실해진 것을 넘어, 80만 단결의 구심이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훈 = 오늘 좋은 의견 고맙다. 지도부가 사퇴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나 직선제를 못하면 총사퇴해야 한다는 것 역시 과도하다. 직선제가 가진 좋은 뜻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조직 내 민주주의이며, 어떻게 단결하고 크게 싸울 것인가의 문제다. 민주노총의 어려움이 선거를 둘러싼 갈등, 정파갈등, 선거를 치른 조직들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임은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못한데 있으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다. 직선제를 하자고 하는 이들도 민주노총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격조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길 바란다.

□ 이 기사는 민주노총 신문 <노동과세계> 종이신문 527호에도 분량을 줄여 게재합니다.



▲ 김용식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사무처장. 사진=매일노동뉴스 정기훈기자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